# 사죄는 사죄로, 용서는 용서로 이어져…5·18 응어리 풀다

5·18 때 경찰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 42년만에 유가족에게 사과

## 당시 사형 판결 내린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2017년 버스기사에 사죄
## 최루탄에 정신 잃어 사고…버스기사는 유가족에 사과하고 묘지 참배
## 유가족 "모두가 피해자…학살 책임자 누구인지 진정한 진실 밝혀야"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위 진압에 투입됐다가 죽임을 당한 경찰들의 유가족이 42년 만에 가해 당사자에게 사과를 받았다. 계엄군과 시위 군중이 극한 대치를 이뤘던 1980년 5월 20일 시민들 요구를 받고 광주 금남로로 고속버스를 몰고 나섰다가 경찰 4명을 충격해 숨지게 했던 가해 남성은 참회의 눈물을 흘렸고, 유족들은 "당신도 피해자"라며 다독였다.

19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따르면 배용주(76)씨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 경찰충혼탑 앞에서 5·18 당시 자신이 몰던 버스 때문에 숨진 함평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의 유족과 마주했다.

이날 만남은 5·18진상조사위가 당시 시위진압에 투입됐던 군과 경찰에 대한 피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순직 경찰 유족들이 사과를 받기를 원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경찰 4명을 사고로 죽게 했던 배씨 역시 유족들의 뜻을 전해듣고 "백번이고 천번이고 찾아뵙고 직접 사죄드리고 싶다"는 입장을 5·18진상조사위에 전하면서 용서와 화해의 장이 마련됐다.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된 만남에는 순직 경찰 4명 가운데 3명의 유족 7명이 참석했다. 배씨는 경찰충혼탑에 분향하고 순직 경찰관 묘를 찾아 사죄의 절을 올렸다.

유가족들에게도 "죄송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이에 유가족들은 "당신의 사과를 받아들인다. 당신도 피해자이고 돌아가신 저희들 아버지도 같은 피해자"라고 다독였다. 유족들은 이어 "이 모든 희생과 죽음에 정작 책임질 5·18 진압의 장본인들은 사죄도 않고 있다"며 "저희들의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5·18진상조사위가 5·18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주셔야 한다"고 했다.

유족들 말대로 5·18 당시 버스를 몰고 금남로로 나섰다 사고를 낸 배씨 역시 일종의 피해자였다.

5·18진상조사위에 따르면 다수 경찰이 숨진 불상사는 1980년 5월 20일 밤 9시 광주시 동구 노동청 앞에서 일어났다.

시민군을 버스에 태우고 시위대의 도청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저지선을 갖추고 서 있는 경찰관들을 뚫을 방법을 궁리를 하던 때였다. 경찰의 체루탄과 터질 듯한 함성 소리가 들려오더니 어느 순간 의도치 않게 시동이 걸린 버스가 앞으로 돌진했다는 게 배씨의 설명이었다. 이 사고로 경찰관 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불상사가 났다.

소요·살인 혐의로 붙잡힌 배씨는 같은해 10월 24일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배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1심 재판장은 중위 계급장을 단 김이수 조선대학교 이사장(전 헌법재판관)이었다.

김 이사장은 37년 만인 2017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배씨에게 "그 재판을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떳떳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제 마음의) 짐이 됐다"며 직접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배씨는 김수환 추기경과 5·18 구속자 가족들이 구명활동에 나섰으나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행스럽게도 1981년 4월 무기징역으로 특별 감형됐다가 1982년 3월에는 20년형으로 줄어 그해 겨울 성탄절 특사로 풀려났다. 이후 1998년 재심에서 '헌정질서를 수호하려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며 배씨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42년 후에 잡은 손**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 진압에 참여했다가 돌진한 버스에 의해 죽임을 당한 고 이세홍 경사 유족 강귀례 씨와 버스 운전 가해 당사자가 19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경찰충혼탑에서 만나 사과와 용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나주 시골마을 '화학물질 취급공장' 놓고 주민 반발

## "건축 허가 안났는데 공사 진행
## 하천 훼손 적발에도 업체 버티기"
## 인허가 과정 불법 가능성 제기도
## 시 "법률 검토 마쳐…신설 가능"

나주시 남평읍 시골마을에 들어설 '화학물질 취급공장'을 놓고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공장 신축 과정에서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도 공사가 진행됐고, 잇따라 산지·하천 훼손 사례가 적발되는데도 업체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행정당국의 미온적 대처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9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장성에 본사를 둔 C사는 남평읍 죽림마을에 3633㎡(약 1000평) 부지 규모로 공장 신설을 추진 중이다. 탄소섬유, 유리섬유를 주 원료로 판넬 등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업체 측은 지난해 12월 나주시로부터 공장 설립 승인을 받았고 이에 앞서 11월 공장 건축 허가를 나주시에 신청했다. 그러나 업체 측이 건축 허가를 받기도 전에 공장 건설에 나섰다가 주민 항의를 받으면서 이 사실이 탄로났다.

이에 나주시는 12월 업체 측에 공사 중지 명령과 함께 지난 3월 16일까지 무단으로 건설된 공장을 원상 회복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건축법 위반 혐의로 업체를 나주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아직까지 공장 건축에 대한 허가를 얻지 못했으나 철골 구조물 등에 대한 원상 회복 명령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당초 공장 설립 인허가 과정에도 불법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공장 신설이 추진되는 곳은 용도지역상 '계획관리지역'으로, 대기·수질오염 물질 배출시설의 신축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전남녹색연합은 19일 죽림마을을 찾아 주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계획관리지역의 화학공장 입지는 불법 소지가 다분하다. 위험물질 누출 가능성도 큰만큼 입지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공장 신설 허가 과정에서 유관부서마다 법률 검토를 마쳤다"며 "주민들의 주장과 달리 공장 신설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우리 공장은 화학물질 배출공장이 아니다. 위험물질은 배출하지 않는다. 불법 공장이었으면 나주시 승인조차 받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문제가 된 공장 건축물 등은 조속히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그러나 나주시 설명을 믿지 못하겠다며 전남도에 공장 신설 허가 전반을 감사해달라고 감사를 청구했다. 또한 공장 신설을 승인한 나주시 행정처분이 부적법하다며 전남도에 행정심판도 청구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산단 대기업 취업 미끼 돈 받은 전 여수시의원 징역 1년 선고

여수산단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지인에게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전 여수시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백주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여수시의원 A(69)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의 아들을 취업시켜주고, 좋은 부서로 발령 내주겠다고 속여 접대비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해 2월 지인에게 소개받은 C씨의 자녀를 대기업 공장에 취업시켜주겠다면서 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자녀 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취업 관련 서류를 건네받기도 했지만, 당시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취업한 사람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 '금고 선정심의위원 명단 유출' 광산구 공무원들 징역형

대가를 받고 광주시 광산구 금고 선정심의위원 명단을 유출한 전·현직 공무원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성재민 판사는 19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산구청 공무원 A(6급)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광산구청 공무원 B(4급)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광산구의원 A씨는 징역 8개월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A씨 등은 2018년 10월 금고 지정 심의위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심의위원회 전날과 당일 농협과 국민은행 측에 위원 명단을 유출하고 소액의 모바일 상품권을 받았다.

B씨는 신용도가 낮은 가족 명의로 국민은행에서 5000만원 상당의 신용대출 편의를 받았다. 구의원 A씨는 지역 복지재단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지정기탁금 800만원을 받아 지역구 경로당 민원을 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단 유출로 인해 은행 직원들이 일부 위원에게 접촉해 콘서트 표를 건네며 편의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의 결과 광산구 1금고 운영기관이 30년 만에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바뀌었으나 농협이 광산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무효 판결이 났다. 광산구는 재공모 절차를 거쳐 광주은행을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

상담문의 010-3733-3933